

文대통령 “실사구시의 실용외교 펼 것”

〈實事求是〉

“취임 7개월간 정상회담 40여 회… 한반도 주변 4대국 관계 정상적 복원하고 외교지평 넓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앞으로도 국익과 국민을 우리 외교의 최고 가치로 삼아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실용 외교를 펼쳐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부르고 경제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는 외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16일 중국 순방을 마치고 처음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 대부분을 새 정부 정상외교 평

가와 포부에 집중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 순방과 관련해 “중국 국민 방문을 끝으로 올해 정상 외교를 마무리했다”면서 “취임 후 7개월 중 한 달가량 외국을 순방해 7개국을 방문하고 유엔 총회,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세안+3(동남아국가연합과 한·중·일 회의체) 등 여러 다자협약에 참가했으며 정상회담만 총 40여 회 가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정부 출범 때 물려받은 외교 공백을 메우고 무너지거나 형편외진 외교관계를 복원하는 등 시급한

과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반도 주변 4국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복원하고,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통해 외교 지평을 유라시아와 아세안까지 넓혔다. 우리 정부의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토대를 더욱 내실 있게 다진 것은 큰 수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순방 결과에 대해서는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정상화를 위한 기틀을 확고히 하는 한편, 시진핑 주석 등 중국 지도자들과 우의와 신뢰를 돈독히 하고 중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 내실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양국은 경제 무역 채널의 전면 재가동을 포함해 정치와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협력력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시진핑 주석과의 회차 인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견고하고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 한 것도 큰 성과”라면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방중 성과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천정배·정동영 의원 “바른정당과의 통합 반드시 저지”

국민의당 천정배, 정동영 의원이 안철수 당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재차 통합 반대를 강조했다.

19일 ‘보수연합 저지와 국민의당 정체성 확립’ 토론회가 평화개혁연대 주최로 전북 전주의 한 웨딩홀에서 열렸다.

평화개혁연대는 국민의당 내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연대 모임이며, 전주에서는 서울과 광주에 이어 세번째 열리는 토론회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천정배, 정동영 의원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보수연합, 적폐 연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천 의원은 “국민의당이 국가대개혁을 저지하려는 기득권 정당인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는 것은 반역사, 반민심, 반문재인을 위한 적폐연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내와 호남 민심의 압도적 반대에도 당 대표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우리 당은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며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나라를 위한 길도 국민의당을 위한 길도 아니다”고 역설했다.

정동영 의원은 “천정배 의원 등과 함께 당을 다시 한 번 살려보려고 한다”며 “다수 의원들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데 통합이 이뤄진다면 의원들은 원하지 않는 덩의 당적을 가지게 된다”고 했다.

이어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연합을 반대하는 것이다”며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소속 의원 %가 보수가 합에 부정적이고 반대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 좌장은 정동영 의원이 맡았고, 권오성 박사(포항공대 불루스대학 정치학 박사)가 기조 발제를 했다. 또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와 김중철 전북도의원(국민의당)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뉴시스



19일 전주 노블레스컨벤션홀에서 국민의당 평화개혁연대가 시국토론회를 연 가운데 천정배, 정동영 국회의원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5대 메이저병원 인큐베이터 22% 제조연월 ‘미상’

김광수 의원 “내구연한 별도 기준도 마련 안돼… 의료장비 전반적 점검과 기준 마련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중인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19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긴급현안 보고서에서 인큐베이터 제조연월 및 내구연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이 보유한 19대의 인큐베이터 중 2대는 제조연월 미상, 2대는 23년 지난 1994년 제조

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대 메이저병원이 보유한 250대의 인큐베이터 중 22%에 해당하는 56대도 제조연월이 미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인큐베이터의 내구연한에 대한 별도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인큐베이터 관리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인큐베이터 장비를 파악해 보니 1994년에 제조된 장비가 있었고 제조

연월조차 파악이 안되는 장비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생아중환자실의 중요한 장비인 인큐베이터에 대한 관리감독이 너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큐베이터 제조연월 문제뿐만 아니라 내구연한에 대한 별도 기준조차 없다”며 “이번 기회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내구연한에 대한 기준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김기춘·조윤선, 2심도 중형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2심에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실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혐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해 각각 징역 7년, 6년을 구형했다.

모두 1심 재판 때와 동일한 형량이다.

특검팀은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 징역 6년, 신동철 전 정부비서관 5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5년,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 3년을 구형했다. 이들 역시 1심 구형량과 같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했다”며 “자신이 누리고 있던 알량한 권력에 취해 어느 누구도 자기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 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였던 문화예술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지난 30년간 국민 모두가 지키고 가꿔온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피고인들은 역사로부터 아무 것도 배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권력 최상층부에서 단지 견해를 달리하거나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며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는 명분 아래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1심 결과는 검찰 구형량과 다소 큰 차이가 났었다.

김 전 실장은 직권남용 혐의에서 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강요 부분이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은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구속수감 상태였던 조 전 장관은 석방됐다.

조 전 장관의 경우 혐소심 재판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해 새로운 증언이 나와 선고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조 전 장관의 청와대 정무수석 전임인 박준우(64) 전 수석은 지난달 28일 “조 전 장관에게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했다”며 종전 기억나지 않는다면 취지의 1심 증언을 뒤집었다.

1심 재판부는 또 김 전 수석·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1년6개월, 김종덕 전 장관·정 전 1차관 2년, 김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견해를 달리 하는 문화예술인 및 관련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일명 ‘블랙리스트’가 실행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외교부, 위안부TF 결과 27일 발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과정을 되짚어보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외교부 장관 직속 TF(위안부TF)가 오는 27일 결과를 발표한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위안부TF는 연내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위안부 합의 관련 양국 간 진행한 협의 과정과 합의 내용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2014~2015년 모두 12차례에 걸쳐 열렸던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중점적으로 살폈으며, 이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합의에 ‘불가역적’이라는 표현과 소녀상 이전 문제 등이 포함된 배경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위안부TF 결과 발표를 통해 합의 과정에서 있었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